데스크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요즘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말이 많 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확히 말하면 광 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투자하는 '광 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각각 21%와 19%의 지분을 투자해 합작 법인을 만든 후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민선 6기 4년 동안 국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개념을 만들어 국책 사업으로까지 이끌었는데 민선 7기 들어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좌초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해법을 찾기 위해선 광주형 일자리의 출 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대타 협을 전제로 출발했다. 완성차 공장을 새 로 만드는 사업인 만큼 투자 관계자인 기

광주형 일자리 누가 발목 잡나

업과 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 기에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중재 역할을 통해 최대 현 안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4자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적정 임금, 적정 근 로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 선이란 4대 원칙을 내세웠다.

노동계 책임 적지 않아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의 표면적인 원인은 '적정 임금'이다. 광주시가 현대・ 기아차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4000만 원 대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는 평균 초임 연봉이 2100만 원에 불과 하다며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한 것이 좌 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물 론 광주시는 초임 연봉이 3500만 원 수 준인데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진화에 나 섰지만 노동계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

'2100만 원 대 3500만 원' 논란의 진 문이다. 위를 떠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광 주시가 치밀하지 못한 관리로 빌미를 제 공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시와 지 역 노동계가 조율을 해 오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 현대차의 '강 건너 불구 경 식' 대처도 문제다.

그렇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 에 몰린 주된 책임은 노동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계는 적정 임금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청 근 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아야 원·하청 관계 도 개선되는데 연봉 2100만 원은 비정규 직보다 못한 나쁜 일자리이기 때문에 참 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이 그렇 다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봉 2100만 원이 사실무근이라

노동계는 더 나아가 현대차와 직접 협 상에 나서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광주시가 출 자하는 공익법인 형식인 광주형 일자리 라는 점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다. 노동 계는 기존 관행처럼 사 측과 직접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가 아닌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

면 판을 깨려는 책임은 온전히 노동계가

감수해야 한다.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광주형 일자리 에서 노동계의 지분은 4분의 1에 불과 하다. 지역 경제계, 학계, 시민 단체 등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 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에 서 노동계가 어깃장을 놓는 것은 어찌 보면 월권이다.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되더라도 노동계는 손해 볼 것이 없 다는 점이다.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직장을 다닐 수 있 지만 지역 청년들은 일할 기회가 사라지 게 된다.

박광태 광주시장 시절, 연산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를 추진하다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연산 60만 대를 100만 대 규모로 늘리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현대·기아차 가 '10년 동안 노조의 무분규' 조건을 내 걸었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무산된 아픈 기억이 있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한 골든타임 이 얼마 남지 않았다. 광주가 답보 상태 에 머무는 동안 군산은 노·사·민·정이 뜻 을 모아 현대차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 다. GM공장이 빠져나간 군산 지역은 투 자 환경은 물론 절실함에서도 광주에 앞 선다. 적정 임금에 주거・교육・의료 등 복 지 지원을 더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고유명사가 되고 있 는데, 광주라는 지명이 붙은 고유명사를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작한다면 말이 되 겠는가. 노동계의 통 큰 양보가 절실해 보인다.

社說

기반시설·콘텐츠 열악 말뿐인 문화도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의 문화 기반 시설과 콘텐츠 산업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관, 미술관, 박물관 등 시설은 물론 출판 ·음악·영화·게임·애니메이션 산업 기반 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역 간 불균형 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국감 자료 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2749개의 문화기반시설중1013개(36.8%)가수 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가 526개 (19.1%), 서울 386개(14.0%), 인천 101개(3.7%) 등인데 광주는 61개로 광 역시 중 부산(103개), 대구(74개) 다음

시설별로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1042 개 중 458개(44%)가 수도권에 있었으 며 대전은 24개, 광주 23개, 울산 18개, 세종 5개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했다. 미술관은 251개 중 수도권이 102개 (40.6%)를 차지했고 광주는 10개에 불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5조여 원의 콘텐 츠 산업 매출액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91조여 원으로 87%를 차지했다. 수도권 은 사업체가 6만140개로 56.8%, 종사자 수도 45만여 명으로 75.6%에 달했다. 반 면 광주는 사업체 수에서 3.3% (3499개), 종사자는 2.0%(1만1857 명), 매출액은 0.9% (9760억 원)에 그쳐 7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였다.

문화 기반 시설의 수도권 편중은 어 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지방과 의 격차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는 '문화수도 특 별법'에 따라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 시로 육성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정 부가 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 산업 진흥 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 또한 문화 분야에 적극 투자하면서 정부 지 원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소방관 한 명 없는 119지역대 수십 곳이라니

소방관이 단 한 명도 없는 119지역대 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수십 곳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17곳의 119지역대 중 상주 소방공무원 없이 주 민으로만 구성된 '무인 119지역대'는 32 곳으로, 모두 전남 지역에 위치한 것이 다. 이는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 구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19지역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전남 각 시・군별로는 해남과 고흥의 무 인 지역대가 다섯 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광양・담양・강진이 각각 세 곳, 여 수・나주・영암・화순・무안・함평 등이 각 두 곳, 보성 한 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 방서 개청을 앞둔 함평 두 곳은 전담 의 용소방대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19지역대는 소방 조직 중 최하위 조 직이다. 소방서 밑에는 동구안전센터나 서구안전센터처럼 몇 개의 안전센터가 있다. 그러나 안전센터 몇 개로는 넓은 관할 지역에 발 빠른 초기 대응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센터 밑에 지역대를 두는 것인데 주로 시골 지역 같은 도심 에서 벗어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일반

한데 전남 지역의 119지역대는 소방관 이 없어 소방 교육을 받은 주민으로 구성 된 전담 의용소방대가 부족한 소방공무 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무인 119지역대가 있는 32곳의 관할 인구를 모두 합치면 10만 2165명이다. 결국 10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소방력 부재에 노출 된 셈이라 하겠다.

소방청에서는 119지역대의 경우각 시 ·도 조례를 통해 인원이 확정돼야 충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데 그렇다면 전남 도는 서둘러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전 문 소방 인력이 없으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 또한 인력 충원이나 예산 지원에 적극 나 서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요정 '태화관'과 선술집 '그린 드래곤'



이병우 단국대 외래교수

역사 강사 설민석이 3·1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기생을 마 담으로, 또 낮술을 마셨을 뿐 아니라 일 본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다고 말해서 고소당한 바가 있다. 검찰은 1년여 조사 끝에 지난 6월 무협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 고 요정을 룸살롱, 기생을 마담이라고 부 른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부를 수 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으로 태화 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탑골 공원 행사에 손병희 일행은 나타 나지 않았다. 만세 운동을 실천한 사람 들은 학생, 일반인들이었다.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탑골 공원에서 태화관

으로 옮겼다는데 독립운동을 평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쉬 운 대목이긴 하다. 장소는 역사적인 의 미를 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태 화관이 당시 고급 요리집이자 요정이었 으니까 좀 과장하게 되면 설민석처럼 말 할 수도 있겠다. 오랫동안 3·1 운동은 탑 골 공원에서 시작됐다고 배웠다. 아마 태 화관을 거론하기가 마뜩잖아서 그랬을 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 중에서 술집과 커피 하우스가 많다. 사람들이 모 여서 의견을 나누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 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커피 하우스가 큰 역할을 했다. 영국의 커피 하우스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토론하는 공론장 역 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프랑스의 커피 하우스는 혁명의 진원지 로 불리운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였는데 특히 카페 '드 포아(de Foy)'는 급진주의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1789년 7월12일 카 미유 데믈랭은 이 카페에서 '무기를 들어

라'고 외치며 혁명을 선도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으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커피 하우스보다 맥주 홀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 사람들 은 맥주를 사회 민주주의의 주스라고 불 렀다. 맥주와 사회 민주주의, 정치 토론 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고 주요 정치적 인 집회는 술집, 맥주 양조장 강당, 맥주 홀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히틀러는 금 주주의자였는데도 최초 연설을 1919년 뮌헨의 호프브로이켈러 맥주 홀에서 거

미국 역사학자들은 보스턴에 있는 '그 린 드래곤 타번(Green Dragon Tavern)'을 독립 전쟁의 지휘소라고 부른 다. 타번은 영국의 펍과 비슷한 선술집 으로 술과 음식이 판매되던 장소였다. 이 곳은 사무엘 아담스를 비롯한 독립운동 가들의 집합소였고 보스턴 티파티 사건 도 이 선술집에서 기획됐다. 폴 리비어 가 영국군의 공격을 알리기 위해 렉싱턴 으로 출발한 곳도 이곳이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 전쟁의 상 징적인 사건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

실은 당시 보스턴에 정박해 있던 배에는 차 뿐만 아니라 사과주도 꽤 실려 있었 다. 사과주도 차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매 겨져 있어 영국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었 다. 차 상자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사과 주는 어떻게 됐을까? 바다에 던지지 않 고 모두 가져와 마셨다고 한다. 보스턴 사과주 사건으로도 불릴 뻔 했는데 그렇 게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집이나 주막집이 공론장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해왔다. TV 역사 드라마를 보면 세상 인심을 파 악하려고 주막집으로 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저잣거리 주막집이 그런 역할 을 했기 때문이다. 3·1 독립운동 민족 대 표들이 태화관으로 간 것은 이러한 문화 적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엔 옥내 집회 장소가 많 지 않았다. 유교적인 풍습도 남아있어서 술을 마시면서 중요 안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태화관이 미 국의 '그린 드래곤 타번' 못지 않은 역할 을 했다고 생각한다.

기

고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 회장

'영어는 언어 살해자'라는 표현을 쓴 언어학자의 말이 갑자기 떠오른 것은 유 치원 방과 후 수업에서 '유치원 영어 수 업'을 허용한다는 발표 때문이다.

필자는 유치원의 조기 영어 교육이 옳 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의 단견으로는 어딘가 마뜩잖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 익힌 유치원생에게 영어부터 접하게 하려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닐 것 같다.

현재 세계에서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 는 나라가 53개국이다. '한국어가 사라 진다면'(시정곤 교수 외 4인 공저)에 소 개된 내용이다. 그 중 미국·영국을 필두 로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정도가 잘사는 나라라 할 수 있 다. 그 외의 국가는 거의가 식민지의 아 픈 역사를 가진 국가들로 대체적으로 가 난하다.

어학 교육에 대한 단상

큰 나라로 인도가 있지만 인도도 영국 의 식민지이었고, 땅이 넓고 인구가 많 다 보니 언어 통제가 어려워 영어를 국어 로 삼았을 것이다.

잘사는 영어 국가 중 싱가포르는 국가 생성 자체가 특이하다. 17세기 초 영국 등 유럽 열강들이 동인도에 회사를 만들어 동양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은 이슬람의 지도자 술탄으로 부터 작은 섬 하나를 사들였다. 그 섬이 싱가포르다. 당연히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다민족 국가에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 통일이 어려웠다.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게 된 배경이다.

영어 사용 국가로서 몇몇 나라를 제외 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많다는 것은 영어 와 국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영 어를 잘해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잘 살 것 같으면 영어 사용국들은 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있어야 옳다. 영어를 익힌다 고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떠나는 우리 나라 학생들이 많다. 필리핀이 우리가 부 러워해야 할 나라인가?

얼마 전에는 강경화 장관이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영어 실력이 시원찮다고 지 적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외교관에게 외 국어는 필수다. 그렇다고 그 외국어가 꼭 영어여만 하는가? 영어를 잘해 외교가 잘 될 것 같으면 영어권에서 태어나 교육 받은 사람들을 외교관으로 맞아들이면

혹여 영어 구사 실력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외교관으로 뽑았다면 그 건 인재를 뽑은 국가의 책임이지 뽑힌 사 람의 잘못일 수 없다. 또 외국어, 특히 영 어를 잘한다고 국가 간 갈등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몰라 일본과 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중국과 얽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가? 같은 언어 를 쓰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남북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요원하다. 언어상의 문제 가 아니다.

외교관은 언어 외에 공부해야 할 것들 이 많다. 외교적 수완, 풍부한 지식, 상대 에 대한 설득력, 세계를 보는 눈, 성숙된 교양, 상대 나라의 역사나 전통 등 끝이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교육에 있다'는 말을 진부하게 여겨선 안 된다. 교육 정책을 몇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해서는 더욱 안 된다. 외국어를 잘 가르치기에 앞서 우리의 언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국력이고 혼이며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지금한국어 사용 인구는 '한국어가 사 라진다면'이란 책에 세계 13위로 나와 있다. 국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글이다. 외국 학교에 제2 외국 어로 한글을 선택하게 한다든가, 세계 유 수 대학에 한국어과를 개설하는 일 등을 외교 정책의 하나로 고려해볼 일이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은 그 들의 공용어로 한글을 사용한다는 기사 가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귀 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에서 제2 외국어 로 한국어를 선택해 배우고 있다는 기사 도 있었다.

그런 일에는 관심 없고 영어만을 강조 하고 있으니 딱하다. 강의를 영어로만 하 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외국 유학생을 위해서라면 더욱 기막힌 현상이다. 유학 생은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익혀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영어만의 강의는 스스로 우리 언어를 쇠퇴시키는 일이다. 유학생 들은 우리말을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 이 없으니 한국어를 익히는 것은 시간 낭 비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한국어를 사용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국가가 막고 대학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꼴이다.

언어의 종속은 문화의 종속이다. 영혼 의 종속이다. 일제 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키려 했던 학자들을 생각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끌 고 가야 할 것인가는 너무도 자명하다.

無等鼓 🥠

관함식(觀艦式)

최근 욱일기(旭日旗) 논란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관함식'(觀艦式·Fleet Review)이란 국가 원수가 자국 함대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의식이다. 일종의 해상 사열인 셈이다. 1346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템스 강 하구에서 함선들을 모아 놓고 전투 준 비를 직접 검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897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에 대대적 행사로 발전 했고, 19~20세기 전 세계로 확대됐다.

관함식은 과거에는 자국의 해상 전략을 과 시하기 위해 실시했지 만, 최근에는 외국 군함

을 초청해 군사 교류를 다지는 국제 행사 로 치러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관함 식은 정부 수립과 해군 창설 1주년을 기 념해 1946년 8월16일 인천 해상에서 열 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제 관함식은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부산에서 열 렸다. 10년 단위로 열린다. 세 번째 국제 관합식은 오늘부터 5일간 제주도 및 인 근 해상에서 열린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13개국 20여 척의 외국 함정이 참가 하는 국제 행사다.

그런데 일본이 해상 자위대 함대기인

집

치

사 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는 한국의 요 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 다. 앞서 10년 전인 2008년 관함식 때는 일본이 해상 사열에 독도함이 참여하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반발해 우리 해군이 이를 강감찬함으로 바꾸는 일도 있었다. 당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한 정부와 해군에 아쉬움이 남는다.

욱일기는 1900년대 초 일본 제국주의 를 상징하는 군기(軍旗)이자, 동남아시 아 국가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 행위와 수

> 탈을 감행할 때 사용한 전범(戰犯)기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 일 나치의 하켄크로이

츠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일본 자위대는 여전히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 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인식 부족을 보 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은 심지어 역사 왜 곡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어제오 늘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 아 국가의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 는 지금, 일본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반성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 하청(百年河淸)일 것인가.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 X 222-0195) 과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부 220-0697 ※구독료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